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14-학인-00004 교사의 학생 체벌 등 인권침해
신 청 인 ○ ○(피해자의 父)
피 해 자 ○○○(○○○○중학교 2학년 10반 재학 중)
피 신 청 인 ○○○(○○○○중학교 교사)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으로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다.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인격권,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들이 다른 학

교에서도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중학교장에게,

가. 학교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나. 관례적으로 교사에 의해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인격권,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4. 11. 13.

나. 신청인 : ○ ○(피해자의 父)

다. 피해자 : ○○○(○○○○중학교 2학년 10반 재학 중)

라. 피신청인 : ○○○(○○○○중학교 교사)

마. 구제신청 요지

피신청인이 2014. 10. 중순경 ○○○○중학교 2학년 10반 교실에서 고데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고데기를 쉐골부위에 던지는 체벌을 하였고, 학생들이 잘못을 하면 하루 종일

교무실 앞에 학생들을 세워두고 있다.

2. 관련 규정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신청인

위 신청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

피신청인에게 2014. 10. 중순경 ○○○ 학생이 학교에 가져온 소형 고데기를 빌려 사용하던 중 적발되었으며, 피신청인이 고데기를 던져 왼쪽 어깨 쇄골부위를 맞았다.

피신청인은 학생의 잘못을 적발하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식사 시간 제외) 동안 계속하여 교무실 앞에 서있도록 하여,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빗자루와 우산으로 종아리 및 엉덩이를 가격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어 반 남학생들 중 절반 정도의 학생이 체벌을 당하였고, 여학생들을 체벌할 때는 손을 사용하여 머리와 등을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가끔은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기도 한다.

다. 피신청인의 주장

학생들을 풀어 놓았을 때와 달리, 체벌을 적절히 사용했을 때 규율이 잡히는 것을 많이 보아 체벌을 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을 때릴 때는 수회가 아니라 한대 가량 때리고 있으며, 그것도 체벌이라면 체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체벌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건의나 불만사항이 들어오지는 않는 수준이며, 평소 본인에게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쓰도록 하는데, 체벌과 관련된 건의나 불만사항은 없었고, 다른 교사에 비해서 학부모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데, 학부모들에게 아이를 때렸다고 이야기하거나, 학생들에게 체벌 이후에 사과를 하기도 하여, 학생들이 체벌로 인해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

학교 바닥 구조가 시멘트인데, 현관에서 교실로 이동 시 신발을 신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신발을 신고 교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발로 엉덩이 2대를 때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는 차원에서 발로 살짝 친 것이며,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청소시간에 청소도구를 함에 넣지 않고 던져 놓으면 청소 빗자루로 때린 적이 있다.

학생들의 잘못을 적발하면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식사 이후에 계속해서 교무실 앞에 서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치마길이, 화장금지 등 학교 기준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벌칙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적으로는 수업시간이 아니고 쉬는 시간 등에 오라고 해서 상담을 하고 있다.

손을 사용하여 여학생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등을 때리는 체벌을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여학생들에게 가끔 화를 내기는 하지만 거의 손을 대지 않으며, 여학생들은 민감하기에 거의 그런 적이 없고, 여학생들이 화장을 해서 걸리면 “젊었을 때 화장하면 안 된다. 피부가 망가진다.”고 말을 하면서 물수건으로 지우거나, 지우고 오라고 하고 있다.

전문적으로 화장을 하는 학생이 서너 명 있는데 피해자도 그 중 한 명이고, 피해자는 공개적으로 늘 혼이 나고 있는데, 여학생들이 욕설을 하거나, 화장을 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혼내고 있지만, 여학생을 체벌한 적은 없다.

피해자 체벌에 대해서는, 혼을 냈지 체벌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갯벌체험이 있기 전전날, 갯벌체험에 대한 버스비 문제로 다른 선생님과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고데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어서 화를 낸 것으로 기억한다.

4. 인정사실

신청인의 구제신청서, 피해자의 주장, 피신청인의 문답서 및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4. 10. 중순경 피해자가 2학년 10반 교실에서 친구 ○○○에게 빌린 소형 고데기를 사용하다 담임 교사인 피신청인에게 적발되었으며, 피신청인은 ○○○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소형 고데기로 쇠골 부위를 가격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로 엉덩이를 1~2회

치고, 청소 빗자루로 때리고, 화장을 한 여학생들의 화장을 화장지로 강제로 지우고, 잘못을 하면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서있도록 지시하는 등 일상적으로 체벌을 해왔다.

5. 판단

가. 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은,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중학교 학교생활규정」 등에 따르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체벌은 신체와 정신에 고통을 가함으로써, 학생의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여 민주시민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벌이 신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체벌을 가하는 자에 대한 체벌을 받는 자의 복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학생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고, 체벌 대상자로 하여금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여 교육적 효과를 저해하거나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

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2011. 3. 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는 의견을 표명하여 체벌의 인권침해성 및 비교육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2014. 10.경 2학년 10반 교실에서 학교규칙으로 금지되어 있는 ‘고데기’를 사용하는 학생(피해자)을 발견한 피신청인은 학생에게서 고데기를 압수하고, 압수한 고데기를 사용하여 학생의 쇄골 부위를 가격(피해자 및 목격자, 피신청인의 주장이 모두 다름 1~수회)하는 행위를 한 것은 학생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소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로 엉덩이를 1~2회 치고, 청소 빗자루로 때리고, 화장을 한 여학생들의 화장을 화장지로 강제로 지우게 하였던 점을 살펴보았을 때, 일상적으로 체벌을 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은 “학생들을 풀어 놓았을 때와 달리, 체벌을 적절히 사용했을 때 규율이 잡히는 것을 많이 보아 체벌을 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을 때릴 때는 수회가 아니라 한대 가량 때리고 있으며 그것도 체벌이라면 체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교육 현장에서 체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약하게 때리는 것은 관촬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교사의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학생의 인격권 등 침해 관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하면서 포괄적 기본권으로 휴식권을 그 내용에 포함(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는 ‘학생은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학교 생활규정」 제26조에서는 체벌 전면금지에 따른 단계별 지도 방법을 정하면서, 훈계, 상담, 보호자 통보, 대체 프로그램 운영, 징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을 비롯한 ○○○○중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교의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점심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오전, 오후)에 학생들을 교무실 앞에 세워두고 반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 학생을 세워둠으로써 어떠한 잘못을 하였다는 것을 모든 학생에게 노출시켜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학생이 정규 수업에 참여하여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데, 단순히 1-2회가 아니라 하루종일 쉬는 시간마다 그러한 행위를 시키는 것은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학교의 교사들이 규칙 위반 학생들을 쉬는 시간에 교무실 앞에 세우는 행위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닌 타 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위들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가. 폭언 및 체벌에 따른 인권 침해 관련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 어떠한 물품(고데기)을 압수하고, 압수한 물품을 사용하여 체벌한 것은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고, 일상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하여 왔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교사의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학생의 인격권 등 침해 관련

피신청인을 비롯한 ○○○○중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교의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점심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오전, 오후)에 학생들을 교무실 앞에 세워두고 반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해당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인격권,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다른 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위들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 16.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전 준 형 (서명)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강 은 옥 (서명)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임 송 (서명)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태리명희 (서명)

[별지 : 관련 규정]

가.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라.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

지 아니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차별은 금지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